윤석열 "靑 개혁…규모 축소하겠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2~98% 갈라치기 종부세 완화 장모 요양급여 부정 과잉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에 대해선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함익병, 노재승 씨의 선대위 합류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잘못된 건 전부 제 책임"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검증)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시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 "저도 검사 출신이니 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며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대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면서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한다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본(본인)·부(부인)·장(장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선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제 처의 명예훼손 부분과 이것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발하면 직접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느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대통령이 봐달라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YTN의 '김건희 씨 2007년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서 허위경력 기재 의혹' 보도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부인 김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장모 관련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으로 본다며 "아주 이례적"이라고 비판하고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달내 처리

소급 적용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1년 간의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포인트 인상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지난 2일 통과)을 논의할 당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검토를 당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과세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차등화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안을 하나의 세트로 하는 '1+1+1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코로나 자가 격리자 거소투표 확대 검토

선관위, 대선·지선 앞두고 추진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소 신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자가·시설 격리자들에 대해 거소투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 의견에는 자가·시설 격리자까지 거소투표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 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 열린 지난해 총선과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의 경우 거소투표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되, 해당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경우에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대면 참여하도록 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거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거소 투표 허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지난 선거 때는 격리자들을 임시기표소로 해서 투표소에 나오게 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를 못 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때에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기우편 등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거소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등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서위조는 징역형 중범죄"…민주,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질타

"윤석열, 부인에 조국 수사와 동일 기준 적용할 수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서위조는 징역형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질타했다.

윤 후보 재임 시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점을 부각하며 "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공문서나 사문서위조는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하여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징역을 살고 있다. 그러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영부인이 되려는 사람의 행위로 보자면, 이는 후보 사퇴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불법행위 아닌가"라며 "(조국 전 장관 관련) 표창장 (위조 혐의)와 비교하면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된 상황과 대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경력 의혹 관련해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등 김씨의 발언이 적힌 보도 화면을 공유하며 "김건희 씨의 해명"이라는 짤막한 설명을 달았다. 자신의 부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씨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영부인으로서 자격이, 결격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장관 되기 전 일이라고 잘 모르겠다고하면 그게 해명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의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내로남불'하지 않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SNS를 통해 "윤 후보님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다"며 "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결혼 한참 전 일로 보이고 그걸 감안해야 한다"고 감싼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조국 가족에 대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 4명 임명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4일 윤석열 후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주선·김동철·김경진·송기석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남 선대위 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유수택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홍기훈 전 의원·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광주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大 특강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3층 길부동산멘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 시	2021.12.22(수), 23(목) 오후2시/ 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부자될 수 있는 아파트 갭투자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2강의 "황금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大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외 "최고 가치" 매물 大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大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예타면제사업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MTN머니투데이-김생민의 비즈정보쇼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혁신 한국인 선정)
(현) 길부동산멘토스쿨 대표
(현) 길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LBA법률중개사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독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애시앙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환급
[주]초록공간
010-6786-2600

장흥군 공고 제 2021 - 980 호

장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관산읍 옥당리 88-4일원 천관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8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재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장 흥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총 계	83,247	-	83,247	100.0	
농림지역	-	증)71,946	71,946	100.0	
자연환경보전지역	83,247	감)71,946	11,301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기 정	변 경	면 적(㎡)	변경사유
-	관산읍 옥당리 88-4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71,946	• 천관산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식생보전등급이 우수한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환원하고자 함

2. 주민열람 내용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12. 13. ~ 2021. 12. 27.(14일간 / 공휴일, 토요일 포함)
나. 공람장소 : 장흥군청(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 ※ 관계도서 :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장흥군청(건설도시과)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061-860-6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행안내
12월19일(일)
▲광주kj산악회 12월19일(일) 강원도철원&한탄강주상정리잔도길"계방"트레킹, 염주체육관06:00,동아병원06:05, 롯데백점06:10,광주역06:15, 문예후문06:25,비엔주차장 06:3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